

한계 부딪친 보건소·개학 앞둔 학교...방역전쟁 초비상

코로나 확진 1만명 앞둔 광주·전남

광주·전남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면서 광주·전남 자치단체가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소 방역 직원들은 업무 과부하로 한계에 봉착하면서 부랴부랴 인력 충원에 나섰지만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오는 3월 개강을 앞두고 입국할 계획이라 방역 대책을 마련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건소는 전쟁중=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광주 4225명, 전남 3083명 등 730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방역 최일선인 보건소를 비롯, 자치단체가 대응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2일 광주 5개구 자치구에 따르면 각 보건소는 코로나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인력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재택치료 대응체계로 전환하는데 따라 확진자 역학조사 및 재택치료자 등 관리에 적극 대응토록 한 데 따른 조치다.

광주지역 일선 자치구는 이에 따라 동구 10명, 남구 16명, 북구 63명, 광산구 30명 등 135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인력을 확충하기 전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상황이 시급해졌다.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의 경우 인력 채용 계획은 논의중인 상황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쟁터로 변했다.

확진자 분류부터 재택치료 관리, 병상 배정까지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맡는 보건소에 확진자와 검사예정자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 동네 병의원의 재택치료 관리 참여 등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인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필수 인력을 제외한 행정직 공무원들도 코로나 업무에 투입,

재택치료자 급증에 업무 과부하 일손 부족 지자체 인력 충원 계획

외국인 유학생 1107명 입국 예정 지역대학 개강 앞두고 방역 고심

자칫 다른 행정 업무 차질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전남도도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갖고 22개 시·군에 위치한 보건소를 상대로 추가 인력 실태조사를 지시한 상태로, 확진자 급증세로 보건소의 '코로나 이외 업무'는 중단토록 했다. 전남도는 총원전 행정인력을 우선 투입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이 진행중이다.

22개 시·군 보건소에 대체 인력으로 필요한 행정인력은 총 165명 중 136명(여수 27명·순천 26명·나주 29명·무안 12명·목포 13명 등)이 이미 근무 중이다. 29명도 대체인력으로 곧 투입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까지 입국=광주·전남 대학가도 외국인 유학생 입국을 앞두고 방역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광주지역 대학에 따르면 광주 11개 대학교에는 올해 신학기에 총 1107명(2022년 1학기 신입생 429명, 재학생 67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할 예정이다.

호남대가 390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대(269명), 조선대(183), 광주여대(101), 광주대(58), 남부대(54), 과학기술원(25), 송원대(21), 광산대(5), 보건대(1) 순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606명(54.7%), 베트남 232명(20.9%), 우즈베키스탄 100명(9%) 순이다.

광주시는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입국전부터 입국시기 분산을 유도하고 입국시에도 PCR검사를 실시한 후 자가격리를 하고 자가격리가 끝나



선별진료소 검사 받는 시민들

23일 광주전남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이날 오후 광주시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고도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입국해 있는 4254명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도 진행한다. 대학별 외국인유학생 연락체계를 갖추고, 개강 전후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도입 금지 및 최소화 등 자체 분위기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인 최진수 전남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는 "지금 방역체계는 아무래도 추적·검사·격리 한계에 부딪혔다"면서 "보건소 인력과 예산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가용가능한 공무원·지역사회 인력을 최대한 이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몰염치 보이스포싱범 항소했다 '된서리'

상담원 말아 100여차례 8억 뜯어...1심 2년 6개월→2심 4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을 말아 공범들과 100여차례에 걸쳐 8억원을 뜯어내고도 돈을 되돌려주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30대 남성이 '1심형(刑)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절반 이상 늘어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중국 청도로 출국, 같은해 7월까지 콜센터 상담원을 말아 보이스포싱 범죄에 가담하는가 하면,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중국 상해로 옮겨 근무하면서 다른 조

직원들과 대출을 빙자해 보증보험료,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이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돈만 112회에 걸쳐 8억7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이지만 8억7000만원을 편취했는데, 합의도 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첫 70m 고가사다리차 등장...초고층빌딩 화재 진압한다

광주북부소방에 우선 배치 소방관 숙달 훈련 진행중

30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시 사용할 수 있는 70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광주에 처음으로 배치돼 운영에 들어간다.

23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광주북부소방에 70m 고가사다리차 1대를 우선 배치하고 숙달훈련을 진행중이다.

70m고가사다리차는 최대 23층까지 화재를 진

압할 수 있는 점 등으로 고층건물 화재 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그동안 광주·전남에는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도 10대에 불과하다.

지난 2020년 기준 광주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60곳(아파트 52곳)에 이른다. 전남지역도 같은 기간 3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만 21곳(아파트 20곳)이다. 최근 붕괴사고가 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도 39층짜리 건물이었다.

지난 16일 화재가 났던 목포시 상동 아파트도

47층짜리로, 이 높이까지 올라가는 고가 사다리차가 전무해 진화하는데만 3시간 넘게 걸렸다.

북부소방은 지난해 12월부터 고가사다리차 훈련을 진행중이지만 세밀한 조치가 필요해 여태껏 실전에는 투입하지 않은 상태다.

북부소방 관계자는 "광주지역 유일한 초고층 사다리차라 북부 뿐 아니라 광주지역 다른 고층 건축물 화재에도 출동을 해야하는 만큼 충분한 숙달을 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순사건 진상규명위 지원단장 현장 방문 의견 청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 지원단장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여수, 순천, 구례, 고흥 등의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했다.

22일 여수를 시작으로 23일 순천, 24일 구례, 25일 고흥 등을 순차 방문한다. 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출범한 뒤 시·군에 설치된 신고처의 접수 상황 및 운영상 미비점을 점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여순사건 유족회와 지역의 위원들을 만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결정, 명예회복 등 위원

회 운영에 필요한 의견을 듣게 된다.

장현범 지원단장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유족과 지역 현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며, 실무위원회(전남도)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진상규명 등 위원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신고 접수기간은 1년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